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Evaluating the Impact of Win-Win Growth Policy Announcements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on the Market Value of Firms

백 종 현 국민대학교 e-비즈니스전공 (fine@kookmin.ac.kr)
권 순 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bkwon@kookmin.ac.kr)
최 병 구*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h2choi@kookmin.ac.kr)

ABSTRACT

Win-win growth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become a cr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 in Korea. Korea government has been attempted to establish strong policy to build right win-win relationship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Along with this strong drive from Korea government, a variety of strategies that enhance win-win relationship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have been adopted. Win-win growth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positive impact on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f firms. Therefor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win-win growth policy success factors, type of the policy, and the results of the policy. Although there is much literature on the win-win growth policy, the effects of win-win policy on firm value is not well understood. We addressed this issue by exploring how win-win growth policy influences a firm's market value using event study methodology. We evaluated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for win-win growth policy announced by Korean large firms from 2004 to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insisted that the announcements of win-win growth policy show negative impact on firm's market value,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insights that may help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managers to revise their policy for better outcomes of their win-win growth policy.

Keywords: Win-Win Growth Policy, Event Study Methodology, Stock Market Reaction, Market Value

1. 서론

최근 정부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상생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 이론의 논쟁 속에 상생협력활동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업측면에서 상생협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은 브랜드, 규모, 자금 마케팅, 연구개발 등 자체 역량이 강한데 비하여 중소기업은 생산기술, 공정 노하우, 기술 역량이 강하다 (Iansiti & Levien, 2001). 따라서

†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1일;

각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상호 필요한 부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면 대기업은 경영의 효율성을 중소기업은 기술의 발전, 규모의 확대 등의 양자가 상생하는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과 언급, 다양한 사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의 객관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은 이제 초보적 단계로 가야할 길이 멀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개념적 연구를 통해 상생협력 정책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았으나 (Margolis et al., 2007; Margolis & Walsh, 2003; Orlitzky et al., 2003) 실질적으로 이를 검증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업의 발표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벤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발표가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벤트 발생 시 관련 기업의 주가수익률 패턴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를 이용해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발표로 인한 비정상수익률을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시행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연구는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혁신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 대기업의 공급사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신뢰, 혁신 등을 강조하거나, 중소기업의 분류유형에 따른 상생협력의 내용이 달라야함을 주장하기도 한다(김기찬 등, 2006a; 김기찬, 김희숙, 2007).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위한 상생협력의 핵심과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높여야 함을 강

조하거나,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라는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화 등, 2006; 김기찬 등, 2006a).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결합유형을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핵심성공요인을 추출하여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기술역량이 협력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 기업간 신뢰형성은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며, 파트너 간 협력과정에서는 협력 파트너 간의 전략 및 자원의 적합성, 명확한 역할분담 및 활발한 의사소통, 신제품 개발로 인한 사업성과의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배중태, 김중현, 2007).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수급관계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협력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강용운, 이장우, 2006).

송창식·박지운 (2009)은 PSBP (philosophy, structure, behavior, performance) 패러다임을 이용한 상생협력 진단 모델을 통해 기업은 물론 정부 간 파트너 형성에 있어서 계약방식의 도입,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 등 민간주도의 상생협력으로 전환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생협력의 성공요인, 상생협력의 결과, 상생협력의 유형 등으로 요약된다. 상생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기업의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발표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Tang et al., 2012; Wang & Bansal, 2012).

III. 상생협력

1. 상생의 정의

상생이라는 말은 1990년대 이후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상생의 정치, 상생의 경

제, 상생의 문화, 남북 상생, 상생의 노사관계 등이다. 경제용어사전에서는 상생을 생태학에서 파생된 개념인 공존 (co-existence)이나 공생 (symbiosis)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영학적, 군사정치학적 설명에 의해서는 윈-윈전략 (win-win)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상생은 상극의 반대말으로써 상극의 정치, 상극의 경제/노사구조 등 이다보니 상생이라는 말은 그런 대립으로 가지 말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나온 단어이다. 특히 상생은 남을 살리자, 남을 잘되게 하자라는 적극적인 도움의 의미가 있다. 관계 기업이 잘되어야 자기업도 잘된다는 것으로서 서로 돕자는 공생보다는 남을 적극적으로 이롭게 하자는 의미이다.

2. 상생협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없는 호리병 구조를 지닌 산업구조의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도체 장비·재료 자립 기반구축, IT혁신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해외공동마케팅 지원, 성과공유제 및 수급기업투자펀드 개편 등 상생협력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찬 등 (2006b)은 대기업 공급사슬의 경쟁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상생협력 발전 모델에 따르면 대기업의 상생경영 투자 확대가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대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연린 기업생태계를 조성 할 수 있으며,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화구조를 이룰 수 있다. 나아가 혁신주도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공급사슬이 기업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관계를 의미하는 공급사슬의 경쟁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

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려고만 하고 있어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상생협력 발전모델은 협력업체가 단가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4대 역량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상생협력의 개념에 대해 산업자원부 (2006)는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협력을 잘해 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상생협력 결과가 국민,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신뢰 형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였다.

IV. 동반성장

1.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 등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무역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국내 산업과 고용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건찬, 강인원, 2011).

과거의 정책은 대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그 효과가 넘쳐 중소기업으로 확산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감세,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정책들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수출주도업종 (대기업)과 내수업종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초래한 것이다. 대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2010년 8.4%로 증대한 반면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은 3.8%에서 2.9%로 하락하였다. 매출액 상위 100대 제조기업의 총생산액 비중은 2002년 39%에서 2008년 51%로 높아져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동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 동반성장의 대두

2.1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

2009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규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MR²⁾, SSM³⁾은 물론 외식산업 등에 제한없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 6월 1,571개사로 434개사 증가, 2012년 10월 1,847개사로 276개사 증가하였다. 물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도 늘어났지만,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보호조치의 폐지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시키는 이유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1979년 도입되었으나, 제도 운영상 부작용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06년 폐지하였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2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진입 내지 확장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대응능력을 증대시키려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대기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사업조정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사후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⁴⁾ 또한 강제수단 없는 자율적 조정에 그쳐 중소기업 보호하기에 미흡하다. 이처럼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 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 (2010년 9월)을 마련하여 민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 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업의 진출·확장 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적합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연구개발 (R&D) 지원 등 품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

3.1 기업 내 모든 거래 활동을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내부화하는 이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기업조직으로 내부화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계량화하여 거래비용이 더 크면 기업조직으로 내부화하게 된다 (Coase, 1937). Williamson (1985)은 거래비용이란 기업 간 거래 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협상·정보수집·계약준수 감시·재계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비용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시장거래가 확대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중간조직적 기업관계의 가능성을

2) Maintenance (유지), Repair (보수) and Operation (운영)의 약자로, 기업에서 제품 생산에 필수인 직접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와 간접 자재를 의미하며 기업소모성자재라고 부른다.

3) SSM(Super Supermarket; 슈퍼 슈퍼마켓)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말한다.

4)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제시했다.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⁵⁾, 기회주의 (opportunism), 불확실성 (uncertainty), 자산 특수성 (asset specificity) 등으로 시장거래의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시장거래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조직 (수직적 통합)을 확대한다 해도 내부화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시장거래와 내부화의 장점을 살려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Williamson (2007)은 기업 간 거래유형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억압적 방법 (muscular approach)이란 거래당사자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모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거래조건 등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온건적 방법 (benign approach)이란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으로 명시하고 앓고 신뢰에 기초한 평판효과를 통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방법 (credible approach)은 각 상황별 이해관계 및 공정한 규칙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 신뢰성 있는 합의에 의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필요 이유

첫째,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리스크 감소를 위해 필요 하다. 동반성장이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합의장치가 필요한데 그 기본정신이 동반성장이다.

둘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교섭력의 우위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왔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기업 간 네트워크 경쟁력을 위해서도 동반성장은 중요한 요인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의 양상이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모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일부는 글로벌 대기업에 관련 부품을 납품하게 되는 이른바 글로벌 가치 체인 (global value chain)에 합류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만의 일방적인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적합한 새로운 거래관행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상생협력과 대·중소기업의 역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경영자원과 핵심경쟁역량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성공여부는 대기업에 매우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생협력에 있어서 대기업이 가진 역할의 중요성만으로 대기업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며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때문에 상생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상생협력 참여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구매자·공급자간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5) 제한적 합리성이란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의 대가 Herbert A. Simon 교수가 주창한 것으로 의사결정은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을 거쳐서 그 정도면 됐다 (good enough)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zero-sum)게임이 아니라 대기업 (구매자)과 협력 업체 (공급자)가 모두 생존할 수 있는 윈-윈(win-win) 게임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 관점에서 전략적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선 관리와 중소기업과의 적절한 정보공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공급사슬관리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대기업은 적절하게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그들과 발전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혁신노력에 대한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력사 경쟁력 제고 목적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반성장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한다 (<표 1> 참조).

5.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5.1 대기업-동반성장의 선도자

동반성장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은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최고경영자의 단호한 실천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동반성장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 불공정 거래관행

5.2 중소기업-역량 있는 파트너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자율적인 윤리·투명 경영과 기업가 정신을 확립해 생산적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과 품질·납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과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해나가야 한다 (<표 2> 참조).

[표 1]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인식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경영자가 단호한 실천의지를 표명 동반성장을 경영전략으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에 대한 합리적 부담기준 마련
기업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 선도	사회적 책임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 경쟁력 제고 목적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

[표 2]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자율적인 윤리·투명 경영과 기업가정신 확립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경영 투명성 강화 기업가정신으로 생산적 경영활동에 전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과 품질·납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표 3]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및 동반성장 모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정비 • 감시자 역할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CEO 및 실무자의 인식 제고 •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 창출 •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3 정부-관계 조율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의 감시자로서 역할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기업 CEO 및 실무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며,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 창출하며,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표 3> 참조).

V. 동반성장 정책 분석

1. 동반성장 추진경과

동반성장의 시초는 2005년 5월 제1차 상생협력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으로 부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재단 설립, 상생협력법 제정, 상생협력지수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으로 “협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감시·시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범위반 예방 등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상생협력회의는 중단되었으며 그 대신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체결로 정

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국내 대기업들은 2008년부터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나, 협약체결에 대한 준수 비율은 높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년도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기업체의 64% 이상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부진,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틈타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201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이라는 용어 대신 동반성장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이에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2. 정부의 동반성장정책 추진 전략 및 현황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 추진 점검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추진전략	정책과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7%), 확산 인프라 구축 •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지원: 경영·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구조 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 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 구성

2.1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단가조정 업무를 못 냈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가조정협의 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중 소기업의 조정신청피해현상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몰제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로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항 구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 단가조정 지원기능 도 활성화하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납품단가조정을 위해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납품단가 조정효과 를 2차 이하의 협력사로 확산하는 한편 납품단가조 정 내역통지 의무사항을 뒤 이행여부를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및 벌금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도 실시한다.

2.2 자의적인 납품대금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정부는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으려할 때는 원 사업자 (대기업)가 감액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입 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사유와 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납 품대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납품업체에 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 정위가 입증토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구두 발주 후 일방적인 위탁 취소나 불 공정 계약서작성 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주예정사실과 물량을 수급업자에게 통 보토록 하는 예측 가능한 발주시스템 도입을 유도하 는 내용이다.

2.3 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공인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른바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기술임치제도는 핵심기술정보를 제의공인기관에 보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정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부당하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기술 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치기관 기밀금고를 기존 400개에서 3,000개로 확충하는 등 기술자료임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기술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기술자료임치제를 이용해 간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귀속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였다. 원가자료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해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료가 탈취된다면 대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4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정부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부의 R&D 사업 내 대·중소기업공동R&D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비중을 상향조정하였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등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 보증프로그램」의 2차 협력사 지원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평가지수를 반영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협력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5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강화

정부는 동반성장 이행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부당한 계약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공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운영한다.

2.6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지원

정부는 역량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이 정신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할인할 방침이다. 또한 「상시 구조개선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금융 및 합병·영업양수 등 절차와 제도상의 특례를 지원한다.

2.7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강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한국형 생산혁신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R&D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및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녹색 성장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신성장분야의 초기시장을 발굴하고 성장장애요인을 제거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토록 독려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종부품을 국산화시키고 M&A 매칭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다.

2.8 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활용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의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도입쿼터를 신속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또한 외국인고용절차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되던 것을 개선해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파견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추가조성, 이를 창업 및 시설투자자금에 지원하며 정책자금·보증 심사 시 성장의 미래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2.9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 마련

정부의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접수창구인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온라인창구를 개설해 이를 통해 신고 된 애로사항을 소관부처 지식경제부·중기청·공정위 등으로 신속히 연결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 후 신고접수상황 및 처리실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활동을 시행한다.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은 매월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정책을 종합조정하며 업종별·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

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다. 또한 동반성장 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상향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3.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현황

대기업의 상생협력은 1차 협력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차 협력업체 경쟁력강화는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의 경영안정성도 도모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면 자연스레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나 해외시장 개척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 지원정책의 유형은 각종 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하도급지급조건개선, 연구개발 지원, 교육훈련지원, 경영지원, 파트너쉽 문화형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정책 발표 유형을 범주화해 살펴보면 금융지원과 하도급지급조건개선과 관련된 재무지원, 각 동반성장 유형을 포괄하여 발표하는 복합지원, 연구개발 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 참조).

[표 5]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유형

동반성장 유형	특징 및 사례
금융지원	대기업 출연으로 조성된 펀드, 기업 내 협력기업 대출제도 등을 통한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무담보 대출, 무이자 저금리 대출 등)으로 협력사들의 금융비용 절감
하도급지급조건개선	대금지급기일 완화, 대금 현금지급 비율 확대
연구개발지원	공동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 및 공정·품질개선 지도, 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축,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투자, 보유중인 기술 협력사 무상제공
교육훈련지원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교육, 인성교육 인력관리·구매 등 실무 강의,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경영지원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장기계약을 통한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 도모, 해외 판로 개척지원
파트너십 문화형성	공정거래위원회, 안전품질위원회, 상생협력 전담조직 운영, 상생협의회, 협력사와의 커뮤니티 강화 등

VI. 동반성장정책과 기업가치

1. 동반성장정책에 대한 시각

1.1 긍정적 시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년 9월~10월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대기업 비중이 40.0%에서 73.0%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대기업 협력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불공정거래 관행, 현금결제비율, 어음결제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일방적 납품단가, 경영간섭 등에서 동반성장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30대 그룹의 2012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지원 규모를 연평균 41.7% 늘려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부정적 시각

현장에서의 동반성장에 대한 체감도는 대기업 16.1%만 체감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였고 28.3%는 보통, 55.2%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현장에서의 동반성장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하여는 68.8%가, 납품단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70.6%의 중소기업이 변화가 없다는 대답을 하여 이 역시 아직은 실감할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의 매출세전 이익의 격차는 2009년 1.98%에서 2010년 5.82%로 양극화가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CEO의 61.3%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33.0%는 다소 심각하다고 대답하여 중소기업 경영인이 느끼는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졌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기업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동반성장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대기업 규제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기 적합업종 제도 등을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정치·경제·사회학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생발전의 개념과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동반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7%인 반면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밖에 되지 않았다. 정책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기득권층이나

대기업들이 외형적으로 동반성장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와 협력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구조나 행위 전반에 대한 틀을 개혁하기보다 대기업 충수를 압박하는 방식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은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사업은 정부나 사회여론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반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대기업이 사실상 대중소기업 상생추진의 주체가 되어 왔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1.3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시각의 차이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더욱 희망하며 인센티브의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한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등 동반성장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장 불균형이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제도 등 3불(不)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이나 제도 기반은 일부 만들어졌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입장차이

동반성장정책 사업 특성상 대기업이 이 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된다. 또한 상생협력사업 실질내용은 대기업이 선도하고 사업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1.4 계량적·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연구의 부재

동반성장정책의 현황 및 효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 및 보고서, 주장의 대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 혹은 관련기업들의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정책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초점은 정책시행, 동반성장 관계 개선,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화 등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 또한 동반성장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기업들이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실질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그 중에서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다.

기업의 동반성장정책의 추진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으로 연구해보는 것은 동반성장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로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동반성장 정책이 기업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요소인 대기업 측면에서 동반성장 정책의 효용을 파악함으로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가설

최근 FTA 체결 등으로 국내시장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업생태계 경쟁력의 위계구조는 조립대기업의 경쟁력, 공급사슬 경쟁력 등으로 구성되며, 대중소기업 상생측면에서 강조되는 공급사슬경쟁력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주요 변수로 하는 부품경쟁

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주요 변수로 하는 연결경쟁력, 지식창조역량을 주요변수로 하는 가치혁신 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글로벌 경영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은 품질불량 및 납기지연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체와의 관계를 단순 하청관계가 아닌 유통과 서비스망을 공유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 역할에 집중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경영전략 중 하나는 불완전한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생태계 속에서 조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 간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생태계 속에서 공급사슬선상의 다양한 기업들이 상호 결합되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을 구축하게 된다. 기업 생태계 속에서 경영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핵심은 기업 간 가치사슬과 경쟁우위이다.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생태계 구성원의 경쟁력, 생태계 네트워크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역량개발 전략의 하나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기술 및 판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복잡성과 변화와 혁신의 수용수준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가치사슬을 이어 갈 수 있는 지속적인 고리를 이어가기 위하여 거래하는 기업과의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거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발표는 기업의 비정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각 상생협력 전략 유형을 나눠보면 동반성장 추진 전략은 금융지원과 하도급지급조건개선과 관련된 재무지원, 각 동반성장 유형을 포괄하여 발표하는 복합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지

원, 경영지원 및 교육지원 등의 기타로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각 전략 유형별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1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a. 대기업의 재무지원 전략 상생협력 발표는 기업의 비정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대기업의 복합지원 전략 상생협력 발표는 기업의 비정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c. 대기업의 연구개발지원 전략 상생협력 발표는 기업의 비정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d. 대기업의 경영지원 및 교육지원과 관련된 기타 전략 상생협력 발표는 기업의 비정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뉴인포맥스 서비스 및 네이버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주요 신문사(연합뉴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자신문) 7개에 발표된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뉴스를 검색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검색 기간은 제한을 하지 않고 검색하였으나 검색결과가 관련 뉴스가 2004년부터 검색되었으므로 전체 수집 자료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자료이다. 검색 단어는 상생협력, 상생, 협력, 동반성장, R&D,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 보증, 보증대출 등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동반성장과 연관된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단어의 조합으로 검색한 결과 중 상생협력 발표와 관련되지 않은 결과를 제외한 뉴스를 대상으로 한정에 정리하였다. 이후 비영리 기관, 정부기관을 제외한 KOSPI, KOSDAQ 등 실질 재무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상장된 기업들로 한정해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검색된 내용 중 본 연구의 주제인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의 내용과 관련없는 기사와 중복기사를 제외한 동반성장,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사를 수집한 결과

최초 수집된 기사는 297개를 수집하였다. 297개의 기사 중 기존 수행사업의 사례 혹은 기획기사 형식의 기사를 제외하고 상생협력·동반성장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를 선정한 결과 최종 91개의 발표 기사가 수집되었고, 그 결과로 40개 기업의 121개 기업발표가 수집 되었다. 40개 기업, 121개 기업발표 중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과 이틀 후의 기간 내에 기업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공고(인수 및 합병, 실적 발표, 배당, 자회사 매각, 경영층 교체, 신상품 발매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34개 기업, 105개의 기업발표를 자료로 수집하였다. 최종 수집된 기사를 상생협력 정책의 특징별로 기사를 분류한 결과 재무지원, 복합지원, 기술협력지원, 기타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이들 선정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보기위해 상생 협력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을 추정기간과 이벤트기간을 설정하고 각 기업의 주가정보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6] 자료수집 결과 요약

자료 수집 과정	수집결과
전체 검색 뉴스	3,256
중복기사 및 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되지 않은 발표 제외	699
비상장 기업 제외	297
발표가 아닌 사례, 기획기사 제외	93
발표일 이전의 상장기간이 245일 미만인 기업 기사 제외	91
최종 91개 뉴스 분석결과	40개 기업, 121개의 기업발표
121개 기업발표 중 이벤트 기간 5일 중 상이한 공고 제외	34개 기업, 105개의 기업발표

추정기간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245 거래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기업의 주가데이터를 이용해 정상수익률을 추정하였고, 이벤트기간은 5일로 발생시점 기준 -2일, +2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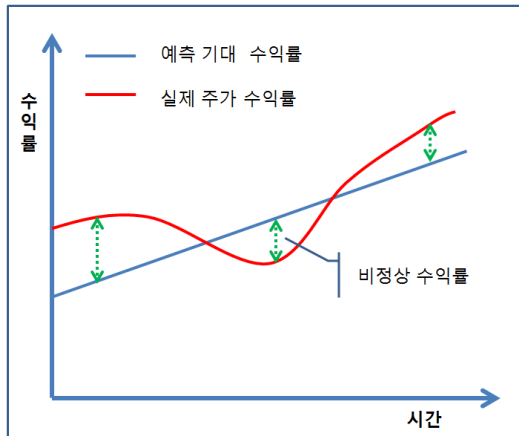
4. 측정방법

4.1 이벤트 연구

이벤트 연구(event study)는 특정 사건(event)에 따른 기업의 공시가 그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Dolley (1933)가 주식분할의 가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벤트연구방법이 처음 제시하였다 (Campbell et al.,1997). Fama et al. (1969)은 주식분할의 공시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 시장가설을 증명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사건 연구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결정, 재무적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변화와 같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건 연구 방법론은 이미 재무 및 회계분야 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그 유용성이 검증된 방법론이다 (Campbell et al., 1997; 정형찬, 2006).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시장의 효율성이다. 즉,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새로운 정보의 출현은 기업의 가치로 빠르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Fama et al., 1969).

이벤트연구방법은 특정 사건의 공시일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비정상수익률을 추정하고, 추정된 비정상수익률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비정상수익률이란 특정 사건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로서, 이러한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벤트연구방법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비정상수익률의 측정

비정상수익률의 측정은 각 기업의 주가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의 시장수익률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첫째, 사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의 과거 기업의 주가 수익률 데이터와 시장포트폴리오의 시장수익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해 회귀상수와 회귀계수를 산출한다. 둘째, 사건일의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산출한 회귀상수와 회귀계수를 이용해 예측 기대수익률을 산출한다. 셋째, <그림 1>과 같이 사건일의 실제 기업의 주가수익률과 예측 기대수익률의 차이가 바로 비정상수익률이다. 이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R_{i,t} = R_{i,t} - (\hat{\alpha}_i + \hat{\beta}_i R_{m,t})$$

4.2 측정

비정상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주가 자료는 특정기간 동안 뉴스 및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뉴인포맥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상생협력 관련 광고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광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주가수익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주식의 주가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을 활용한 시장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시장모형은 어떤 주식의 수익률을 종속변수 $R_{i,t}$ 로 하고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지수 수익률을 독립변수

$R_{m,t}$ 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회귀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R_{i,t} = \alpha_i + \beta_i R_{m,t} + \epsilon_{i,t} \quad (1)$$

이때

- $R_{i,t}$ = t일 주식 i의 수익률
- $R_{m,t}$ = t일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 α_i = 위 식의 수직축절편, R_m 이 0일 때 R_i 의 수익률
- β_i = 증권 i의 베타계수로서 위 식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상수
- $\epsilon_{i,t}$ = 오차항

본 연구에서 시장수익률은 거래소 기업의 경우 종합주가지수를 코스닥 기업의 경우 코스닥지수를 활용하였다. 추정기간은 245일을, 이벤트 윈도우는 -2일부터 +2일까지의 5일(공고당일 이를 기준으로 이틀 전, 이틀 후 포함)을 사용하였다. 비정상수익률 (ar: abnormal return)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모형 (market model)을 적용한다. 시장모형은 시장추세변동과 개별기업 주가변동 간의 선형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모형이다.

$$AR_{i,t} = R_{i,t} - (\hat{\alpha}_i + \hat{\beta}_i R_{m,t}) \quad (2)$$

비정상수익률은 기업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이벤트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에 대한 불편추정치이다.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var(AR) = \left(s_i^2 \left[1 + \frac{1}{T_i} + \frac{(R_{m,t} - \bar{R}_m)^2}{\sum_{\tau} (R_{m,\tau} - \bar{R}_m)^2} \right] \right) \quad (3)$$

표준화된 비정상수익률을 누적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적비정상수익률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

$$CAR_{i,t} = \sum_{j=-t}^t AR_{i,j} \quad (4)$$

$$VAR(CAR_{i,t}) = \sum_{j=-t}^t VAR(AR_{i,j}) \quad (5)$$

N개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각각 구한 후, 평균값을 취하여 누적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의 분산을 구한다.

$$\overline{CAR}_t = \frac{1}{N} \sum_{i=1}^N CAR_{i,t} \quad (6)$$

$$var(\overline{CAR}_t) = \frac{1}{N^2} \sum_{i=1}^N var(CAR_{i,t}) \quad (7)$$

또한 두 집단 간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 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식과 같이 통계량을 구한다.

$$t = \frac{\overline{CAR}_1 + \overline{CAR}_2}{\sqrt{(var(\overline{CAR}_1)/N_1) + (var(\overline{CAR}_2)/N_2)}} \quad (8)$$

5. 분석결과

본 연구의 기업발표를 상생협력 전략에 따라 요약하면 재무지원이 80개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지원이 그 다음으로 25개, 기술개발지원 11개, 기타 정책이 5개로 분류되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변동을 파악해 비정상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표 7> 참조).

[표 7] 상생협력 정책에 따른 표본 특성

상생협력 정책	표본 기업 수
재무지원	69
복합지원	21
연구개발지원	10
기타	5
총합계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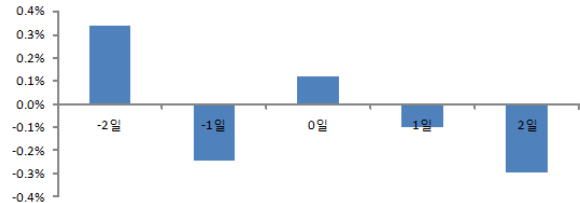
이벤트연구를 통해 상생협력지원 전략과 각 지원 전략별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상생협력지원 전략과 각 지원 전략별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의 관계

동반성장 전략	표본수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	t-value	비고
상생협력지원	105	-0.17%	-3.66***	채택
재무지원	69	0.0026%	-0.35	기각
복합지원	21	-0.685%	-3.15***	채택
연구개발지원	10	0.43%	0.94	기각
기타	5	-1.178%	-1.242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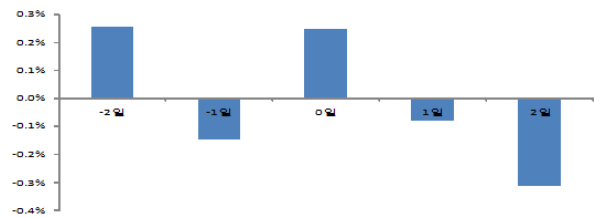
* p<0.1, ** p<0.05, *** p<0.01

상생협력지원 전략 발표와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 부의 유의한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림 2>는 이벤트 윈도우 일별 상생협력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 비정상수익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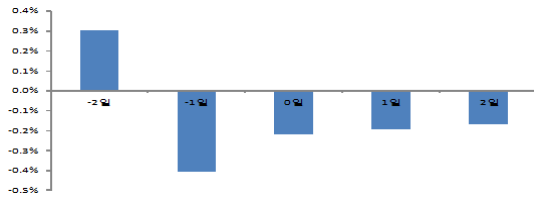
<그림 2> 이벤트 윈도우 일별 상생협력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

재무지원 전략 발표와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은 이벤트 윈도우 일별 재무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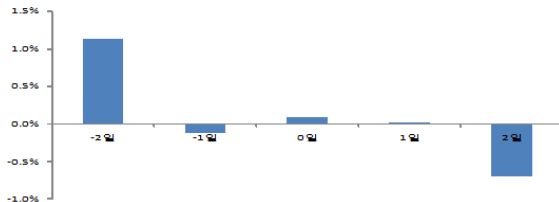
<그림 3> 이벤트 윈도우 일별 재무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

복합지원 전략 발표와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 부의 유의한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림 4>는 이벤트 윈도우 일별 복합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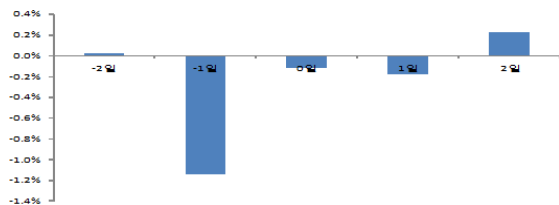


[그림 4] 이벤트 윈도우 일별 복합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

연구개발지원, 기타지원 각 전략별 발표와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 유의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이벤트 윈도우 일별 연구개발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이벤트 윈도우 일별 기타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이벤트 윈도우 일별 연구개발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



[그림 6] 이벤트 윈도우 일별 기타지원전략 공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

VII. 결론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 발표를 분석해보면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은 금융지원과 하도급지급조건개선과 관련된 재무지원, 각 동반성장 유형을 포괄하여 발표하는 복합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지원, 경영지원 및 교육지원 등의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관련 동반성장 관련 발표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벤트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발표가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인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동반성장 정책의 성과를 기존 연구와 다른 객관적·재무적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동반성장과 관련된 발표가 기업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각 동반성장 정책의 유형별로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재무지원, 연구개발지원, 기타 지원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살펴볼 수 없었지만, 복합지원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동반성장 정책이 비정상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전략 중에서도 복합지원만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지원이 각 유형별 전략을 포괄하는 전략으로써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되는 전략 발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업의 대부분 동반성장 지원정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해 발표시점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반성장 정책의 발표가 기업의 주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의 측면에서 주로적으로 자원을 협력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로 샘플사이즈가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5개 상생협력 발표를 자료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사건의 개수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기업의 수도 35개 기업으로 다양하지 못하다. 둘째로 상생협력 발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주가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대기업 측면에서만 측정한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은 협력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연구개발 지원, 경영지원 등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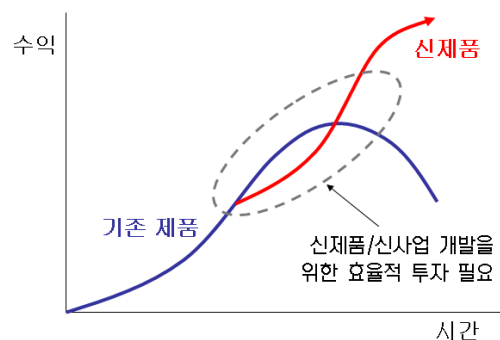
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 측면에서는 상생협력 발표 시점에 발생하는 투자로 인해 재무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의 투자를 수혜 받는 입장인 협력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 된다. 중소기업의 기업가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상생협력 발표 유형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복합지원, 재무지원, 연구개발지원, 기타 지원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자의적인 분류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발표가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는 동반성장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지는 못한 것이 한계이다. 동반성장 정책의 발표시점에 대기업 측면에서 대규모의 투자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되지만, 동반성장 정책 또한 투자의 일환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Brews and Purihit, 2007; Grant, 2003). 동반성장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로는 기업의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 협력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기업생태계의 발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Wang & Bansal, 2012).

비록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는 윈-윈 (win-win) 게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zero-sum) 게임이 아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더 이상 기업 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공급사슬 대 공급사슬 간의 경쟁이다. 기업 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공급사슬 간의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윈-윈 공급사슬관리전략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바람직한 공급사슬관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관계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급사슬관리의 결과는 적절한 부품 (the right product)이 적시 (the right timing)에 적절한 원가 (the right price)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 관점에서의 전략적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경제적 공급선 관리와 중소기업과의 적절한 정보 공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공급사슬관리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대기업이 전략적 공급선 다변화의 주체가기에 상생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셋째, 제품(사업) 수명주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림 7> 참조), 대기업이 신사업/신제품개발 등 장기적인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기술투자 등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의 대형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사업/신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제품/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기업들은 핵심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7] 제품(사업) 수명주기

넷째, 기업이 속한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향상시켜 외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감하는 의미가 있다. 개방형 경제시스템 내에서 지역 혁신클러스터 등의 형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생

태계 전반에 걸쳐 상승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경영학의 I/O 분석을 통한 투자승수 효과를 분석하면, 대기업의 비관련 분야 투자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다시 대기업으로 피드백 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경쟁의 양상은 단일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때문에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신뢰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이행이 글로벌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대두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박경신 등, 2011; Carroll, 1991).

여섯째,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생태계 창출을 위해 상생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상하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할 필요하다.

동반성장동반성장 정책의 추진 목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손해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시각 차이를 줄이고,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기업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기업은 적절하게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그들과 발전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기술의 혁신과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중소기업 역시 자체적인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연식, 2011).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1] 강용운, 이장우 (2006),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28권, 제3호, 243-268.
- [2] 김기찬, 김수옥, 박건수, 박성택, 박지윤, 송창석, 이종욱, 임일, 강호영, 한정화 (2006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설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3호, 381-410.
- [3] 김기찬, 김희숙 (2007), 사회적 자본 축적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량 진화모형 개발과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진화경로 추적: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OD (Organizational / Dynamic Capability)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2007년 통합학술대회 발표, 한국경영학회.
- [4] 김기찬, 송창석, 박지윤 (2006b),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형의 세분화와 전략-중소기업의 L, A, J유형 분류와 성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 29권, 제4호, 133-151.
- [5] 김세중 (2011),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제13권, 2호, 71-97.
- [6] 김용훈 (2012), 대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회사 매칭 시스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7권, 제1호, 297-252.
- [7] 박경신, 이수영, 박선래 (2011), 기업의 사회적 책

- 임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제품브랜드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제12권, 제5호, 89-100.
- [8] 박우종, 박광호 (2012),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경쟁력이 상생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업경시시스템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71-178.
- [9] 배종태, 김중현 (2007), 대·중소기업 신제품개발 협력과정과 상생정책, 중소기업연구, 제29권, 제4호, 295-318.
- [10] 산업자원부 (2006),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모델과 정책방향”, 산업자원부.
- [11] 송창석, 박지윤 (2009), PSBP Paradigm을 이용한 상생 협력 진단모델 구축: 발전사와 협력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1권, 제2호, 255-272.
- [12] 안연식 (2011), 기업의 특허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우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83-96.
- [13] 이건찬, 강인원 (2011), 혁신제도 촉진환경과 제도 수용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제11권, 제5호, 79-90.
- [14] 정형찬 (2006), 사건연구방법론에서 소표본 문제와 모형의 검정력, 증권학회지, 제35권, 3호, 107-140.
- [15] 최병구 (2004), 효과적 지식경영을 위한 사람 혹은 시스템 중심 지식경영 전략: 이벤트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경영정보학연구, 제14권, 제3호, 55-75.
- [16] 한정화, 이종욱, 김기찬 (2006),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 대·중소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보고서, 40(1), 64- 83.
- [2] Campbell, J. Y., Lo, A. W., and Mackinlay, A. C. (1997), *The Econometrics of financial marke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3] Carroll, A.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 [4] Choi, B. and Jong, A. M. (2010), *Assessing the Impact of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Announcements on the Market Value of Firms*, *Information & Management*, 47(1), 42-52.
- [5] Dolley, J. C. (1933), *Characteristics and Procedure of Common Stock Split-Ups*, *Harvard Business Review*, 11(3), 316- 326.
- [6] Fama, E., Fisher, L., Jensen, M., and Roll, R. (1969), *The Adjustment of Stock Price of New Inform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0(1), 1-21.
- [7] Grant, R. M. (2003), *Strategic Planning in a Turbulent Environment: Evidence from the Oil Majo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6), 491- 517.
- [8] Iansiti, M. and R. Levien (2001),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82(3), 68-78
- [9] Margolis, J.D. Elfenbein, H.A. and Walsh, J.P. (2007), *Does in Pay to be Good? A Meta-analysis and Redirection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 [10] Margolis J.D. Walsh, J. P. (2003), *Misery Loves Companies: Rethinking Social Initiatives by Busi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2), 268- 305.
- [11] Orlitzky, M. Schmidt, F. L. and Rynes, S. L. (2003), *Corporate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A Meta-analysis*, *Organization Studies*, 24(3), 404-

[국외 문헌]

[1] Brews, P. and Purohit, D. (2007), *Strategic Planning in Unstable Environments, Long Range Planning*

- 441.
- [12] Tang, Z, Hull, C.E., and Rothenberg, S. (2012),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gagement Strategy Moderate the CSR_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9(7), 2174-1303.
- [13] Wang, T. and Bansal, P. (2012), Social Responsibility in New Ventures: Profiting from a Long-Term Orient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10), 1135-1153.
- [14]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 [15] Williamson, O. E. (2007),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 Introduction*, *Economics Discussion Papers 2007-3*,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 저 자 소 개 ●



백 종 현 (JongHyun Baek)

현재 국민대학교 e-비즈니스 전공 석사과정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산·학·연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이다.



권 순 범 (Suhn Beom Kwon)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KAIST 경영정보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국방부 산
하 국방정보체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APJIS', 'Information System Review', '한국전자거래학회지'의
편집위원과 '지능정보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대우증권, LG전자, 롯데
그룹, 조달청 등의 기관에 대한 e-비즈니스 전략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주
요 연구분야는 e-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IT 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 기획, 모델
링, 개발 등이다. 주요 저서로 '경영정보시스템원론 (2012)', 'ERP와 경영혁신
(2008)', '서비스사이언스 (2006)', '인터넷과 마케팅(2003)' 등 이고,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지능정보연구, APJIS, 경영과학, IT서비스학회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병 구 (Byounggu Choi)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ST 경영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University of
Sydney,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ies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
구분야는 지식경영, 인터넷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평가 등이며 지금까지 이와 관
련하여 Journal of Association for the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MI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I&M, 경영정보학 연구 등을 포
함한 다수의 국내 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현재 Journal of Association
for the Information Systems, I&M, 지식경영연구 등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